생활환경이 농촌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주는 효과
-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대상으로 -

Effect of Living Environment on Rural Residents' Choice of Place of Residence
- Regarding Rural Services Standard -

김 정 태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부교수)

Abstract

Jungtae Kim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 of the rural services standards on the population movement of rural residents. As can be seen in the analysis result, the rural services standard affects the movement between villages.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maintaining public order, providing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robability that the residents settle in villages. From these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living environment is a condition that affects the population movement among rural areas although it seems that such factors as income and employ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ovement of rural residents to other rural areas and cities.

Keywords: Rural Development Project, Marginal Village, Population Movement, Rural Services Standard.

I. 서론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국가는 고유한 성장경로를 갖지만(World Bank, 2008), 공통점은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은 농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한다(Taylor & Martin, 2001). 한국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으로 농촌은 큰 변화를 겪어 왔다(정원기·안영진, 2016: 515).

최근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총 인구 중 농촌인구 비율은 2015년 18.4%를 기록, 하락 추세에서 처음으로 벗어났고, 수도권에서만 나타나던 인구 순증현상이 전국 농촌 시·군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김정섭·이정해, 2017: 1). 그러나 여전히 제한된 농촌지역에서만 인구가 증가하고(박시현·최용욱, 2014), 유출지역과 유입지역의 관계와 지역의 스케일에 따라 도시화의 연장인 광역적 도시화의 과정일 수도 있다(임석회, 2017: 45-46).

따라서 농촌사회의 일반화된 상황으로 보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인구유입은 지역균형발전과 농촌사회 유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긍정적 기능을 한다(강호제, 2016).

귀농·귀촌 인구의 효과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이주동기(강대구, 2006; 강대구, 2007), 지원교육(변혜선, 2016; 마상진·김경인, 2016), 공동체적응(박대식, 2016; 김경례, 2016; 김정섭·오정훈, 2016; 이철우·박순호, 2015; 김백수·이정화, 2013) 등의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농촌사회에서 인구이동의 사회적·경제적인 의미에 주목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이철우, 2015: 208). 그러나 농촌사회에 거주하는 인구의 이탈과 관련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이 덜하며, 생활환경이 귀농·귀촌인의 농촌-도시, 농촌-농촌 간 이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증가가 둔화되면서 자연적 증가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인 사회적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김상원·이훈래, 2016: 738) 농촌주민 인구유지를 위한 지역개발방향 설정에 제약이 있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나아가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촉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선진적 정책수단이다(송미령 등, 2010: 408).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생활환경 측면에서 인구유출을 막고, 귀농·귀촌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수단이며, 도시와 농촌 공간의 이질적인 변화로 인한 사회 환경의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가적 기준이다. 그러나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연구는 기준의 마련과 달성정도를 발표하는 정도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농촌인구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에 대한 파악은 모호하다.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농촌주민의 희망거주지 선택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2013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의 일부로서, 사업이 완료된 읍면대상지의 농어촌서비스 기준수준과 거주 희망지역 간의 선택속성은 이항로짓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거이동의 결과가 아닌 선호에 따른 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의의 확대는 제한적이나, 귀농·귀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귀농·귀촌 의향조사로 역귀농·귀촌비율이나 어떤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지를 분석함을 고려하면(김철규 등, 2011; 마상진 등, 2016),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농어촌의 생활환경 조건이 농촌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주는 효과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인구이동의 원인으로서 생활환경이 주는 효과를 살핌으로서, 고용 등의 경제적 동기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 농촌인구 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대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효용성을 살필 수 있어 관련된 정책적 수단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개념과 현황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도농격차 해소와 농촌주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종류들을 구체화하고 설정한 지표들이다. 학술적 개념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의미하며, 법적개념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서(김광선, 2013: 1), 유사한 정책이 영국과 독일에서 시행 중이다(송미령 등, 2010: 410-413).

농어촌 주민입장에서는 국가적 최소기준인 농어촌 서비스기준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수준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게 되어(김광선 등, 2012: 269), 주변부 특성이 심화되어 사회적 불평등의 공간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 개선에 적어도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담보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대한 국내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관련된 논의는 첫째, 지역수요와 상황에 맞는 지표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박진도, 2014; 윤정미, 2013), 둘째,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생활권의 개념으로 공간단위로 재구성하고, 달성여부에 맞춘 지표설정은 주민평가에 기초하여 질적인 측면의 반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김정태, 2012). 주민의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 마저 부족한 상황의 영향일 수 있으나(윤병석, 2012), 관련된 연구의 공통점은 지표의 타당성과 측정방식의 개선에 한정되어, 농어촌서비스기준이 갖는 효과성 검증이 부족하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농촌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생활권 내 접근성의 개념일 뿐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시설물배치와 동선,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는 요소로서 도시계획과 유사하나(권영상, 2011). 다른 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의 주된 주체로서 민간부문이 배제된 공공부문의 역할로 한정되며, 삶의 질 법을 근거로 범정부차원의 협력과 농어촌 지자체의 이행을 촉구한다.

그러나 의료, 문화 등의 서비스는 주로 민간부문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로서,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가 점차로 민간부문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따르면,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인구규모가 부족하다. 따라서 설정된 지표가 주로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지표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고민을 알 수 있지만,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정책적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또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공급자 시각이 아닌 주민수요에 기초한 접근을 강조하지만, 평가방식은 여전히

공급자 시각에서 달성여부와 지자체의 독려를 강조할 뿐, 수요자인 주민이 그 기준에 대한 유용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또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부문별 차이는 있지만, 농어촌의 종합 이행지수는 -12.583으로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김광선 등, 2012: 284), 지자체별 달성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농촌사회에서 인구이동의 사회·경제적인 의미에 주목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이철우, 2015: 208).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촌주민의 농촌지역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고, 도시주민의 농촌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적 목적을 포함한다. 따라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내 지자체의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여, 농어촌서비스 기준충족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생활환경이 농촌주민 인구이동에 주는 효과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첫째 1950-60년대의 농촌지역 내 잉여노동력에 초점을 맞춘 루이스 이중모델, 둘째 1970-80년대의 농촌이주 노동자로 인한 도시 내 실업문제를 설명하는 Harris-Todaro 모델, 셋째 노동이동과 관련된 일련의 미시경제모델은 의사결정단위로 가구, 이주네트워크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Su et al., 2017: 5). 즉 고용은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어 왔다.

농촌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축소되고 있으며, 경제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농업부문의 중요성의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Knox and Mayer, 2013: 140; Courtney et al., 2007), 농촌관광과 같은 새로운 기능의 진화에 의해서도 보완되지 못했다(Wirth et al., 2017: 63). 또한 농촌지역 중심지 역할을 하는 소도시는 노동기능과 인프라 같은 원래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였다(Lintz and Wirth, 2008; Naumann and Reichert-Schick, 2012). 따라서 여전히 고용 등의 경제적 상황은 농촌인구의 도시이탈의 설명에 유효하며, 생활인프라 기능저하가 일정부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Su et al.(2017)은 중국 내 농촌주민의 지역 내 이동자 수가 지역 간 이동자 수보다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보여주며, 농촌과 도시 내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농촌지역에서 가까운 도시로의 이주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정일홍과 이성우(2010)는 수도권 도시민의 농촌 이주는 공간적 분포가 다양하고 이동거리가 긴 반면에 비수도권 도시민은 권역 내 이동이 주를 이루며, 생애주기 상 직업적 요인이 강함을 보여준다. Su et al.(2017)의 관점으로 정일홍·이성우(2010)의 연구를 해석하면, 점차 농촌과 권역 내 도시, 농촌과 농촌 간 이동패

턴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이동의 중요한 설명요인인 고용보다, 소득외적인 생활환경이 작용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실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동은 도시와 농촌 간 이동뿐 아니라 농촌에서 농촌으로의 이주가 있으며(Gkartzios and Scott, 2009), Walford(2007)는 가까운 농촌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근린재배치가 농촌이주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을 제시한다.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동기는 일반적으로 가정, 직장 및 교육, 주거의 세범주로 구분된다(Van Dam et al. 2002). 가정적 동기는 결혼, 자녀출산, 이혼 등의 삶의 사건에 의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행동으로서, 가족과 더 가까이 살고 싶은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Van Dam, 2000). 직장 및 교육과 관련된 동기는 직업변화, 직장생활의욕,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끄는 범주에 속한다(Van Dam, 2000).

주거동기는 주택과 주거환경의 질과 관련되는데, 주거환경의 질은 농촌지역으로의 이주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여겨진다(Gkartzios and Scott, 2009; Deller et al., 2001; Walmsley et al., 1998; Halliday and Coombes, 1995; Halfacree, 1994). Halfacree(1994)는 신선한 공기, 매력적인 풍경과 같은 공간적 요소를 물리적 요소로 구분하고, 친근한 이웃, 평화로운 삶과 범죄가 적은 요인을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Steenbekkers et al.(2008)은 네델란드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 주택특성 다음으로 공간의 평온함과 같은 환경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해외연구들은 가정, 직장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함께 주거환경의 질과 같은 생활환경 요소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주지 선택에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주거환경과 관련된 이주는 주로 단거리 이동과 관련이 있고, 고용과 관련된 동기는 주로 장거리 이동과 관련이 있다(Halfacreee, 1994). 이러한 논거를 따르면, 생활환경 요소는 농촌지역 내부의 인구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농어촌서비스 기준에서 말하는 육아시설, 소방, 치안 등과 같은 생활환경의 변수가 농촌지역 인구이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반면, 관련된 근거는 찾아볼 수 있다.

장민기 등(2014)은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의료·교통 등 생활환경이 편한 곳으로 이동(11.3%)', '자녀교육에 제약이 덜한 곳으로 이동(1.6%)'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도시로의 역귀촌은 '생활비 부족(15.4%)', '농업노동 적응 어려움(15.4%)', '직장관계(7.7%)'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장거리 이동에 Halfacreee(1994)의 연구와 같이 여전히 소득과 고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소득과 고용이 비슷한 조건일 경우 농촌주민의 이동에 생활환경부문이 일정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갤럽(2016)은 현재 거주지 선택이유로 '생활환경이 편리해서가 농업인(12.9%), 귀촌인(16.3%)', '자녀교육환경이 좋아서는 귀농인(2.3%), 귀촌인(4.2%)'임을 보여준다.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에 '의료·교통 등 생활환경이 더 편리한 곳으

로 가기 위해서가 귀농(10.1%), 귀촌인(43.4%)', '더 나은 자녀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귀농(4.8%), 귀촌(8.1%)'으로 분석된 결과는 이를 증거하며, 농경지의 매매와 구입으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귀농인보다 귀촌인의 경우 생활환경이 농촌지역 내 거주지 이동에 작용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환경의 비율은 낮지만, 30대 이하 귀농·귀촌인은 자녀와 함께 농촌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타 연령대에 비해 농촌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며, 직업적 이유로 인한 귀농이 전체 귀농인의 29.6%인데, 30대 이하 귀농인은 직업적 이유로 귀농한 비율이 53.6%로 높다(김정섭·이정해, 2017: 5-6). 이 같은 결과는 이주의 동기로서 교육적 환경의 비율은 낮지만, 30대 이하의 농업인의 이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생활환경은 한계마을의 유지에도 영향을 준다. 박경철(2014)은 도로와 교통여건은 한계마을을 결정짓는 요인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님을 제시한다. 윤정미·김동환(2017: 131-132)은 교통인프라, 의료시설과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을수록 한계마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활환경이 한계마을 유지에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상의 논의들은 직업과 소득이 농촌과 도시 간 이동에 영향을 주지만, 생활환경도 작용하며, 특히 농촌과 소도시, 농촌과 농촌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농어촌서비스 기준에서 제시되는 생활환경은 대부분 민간시장에 의해 공급되는 문화, 교육, 의료, 교통서비스 등의 부문 중 주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것들로 한정된다. 따라서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제공하는 생활환경이 농촌지역의 희망거주지 선택에 주는 효과를 살피는 작업은 인구유출을 막는 수단으로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주로 고용, 소득을 변수로 설명해 온 농촌인구 이동에 생활환경 변수가 갖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으며, 도출된 결과는 농촌인구 이동과 관련된 논의에 기여할 것이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어촌현실에 비추어 시도도 좋고, 목적도 타당하다. 그러나 정책목적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 타당한가는 또 다른 차원이다.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아닌 이상, 농촌을 위해 이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떠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는 자괴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도 효과성을 검토해 보는 시도는 중요하다.

Ⅲ.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3년 5월 기준 읍·거점면소재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38개 권역

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자료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추진위원장, 이장 등의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설문은 사업지의 배후마을 주민을 포함하여 226명이나, 결측치 등의 자료선별과정을 통해 최종분석은 1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참조).

조사된 설문대상자는 남성 172명, 여성 7명이다. 설문대상자 대부분이 읍면거점개발사업 대상지 및 배후마을의 추진위원장, 이장 등과 같은 마을 내 리더들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농촌사회 내 남성중심의 보수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여성의 수가 부족하여 일반화는 부족하다. 그러나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기에 성별효과를 살피기 위해 변수추출과정에 포함하였다.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78명으로 가장 많고, 50-60대 미만 58명, 40-50대 미만 26명, 40세 미만 17명으로 전형적인 역피라미드 구조의 인구형태를 보여주어, 조사자료는 농촌사회의 노령화된 사회구조를 잘 반영한다.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143명으로 가장 많다. 1-5년 미만 14명, 5-10년 미만 13명으로 연령대를 고려할 때, 귀농 혹은 귀촌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조사된 문항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거주지역의 주된 산업은 수산업 6명이 포함된 농업 126명, 서비스업 28명, 기타 22명이다. 설문대상자의 직업은 농업 109명, 기타 70명이다. 직업으로 조사된 항목은 농업, 어업, 어업 및 농업, 기타의 4 범주로 조사되어, 공무원, 회사원 등 1차 산업 외 직업군은 모두 기타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어업은 2명이 있었으나, 분석결과의 정교화를 위해 농업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종속변수인 희망거주지는 마을 내(70명)을 레퍼런스로 읍면소재지 81명, 인근 시·군 14명, 대도시 14명이다. 인근시·군, 대도시의 인원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의 범주는 마을 내, 마을 외(읍면소재지, 인근 시·군, 대도시)로 구분하였다. 마을 내와 읍·면 소재지를 포함하여 동일 시·군내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비율은 약 84.4%로 귀농·귀촌 패널 1,039명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율인 88.8%보다 조금 높지만(윤순덕 등, 2017),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분석에 활용된 조사 자료의 설문문항에서 인근 시·군은 다른 시군의 읍·면 소재지 범주를 포함한다. 이를 고려하면, 윤순덕 등(2017)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되어, 귀농·귀촌자의 시각과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분석변수

변수				
종속변수				
이항로짓	마을 내(70명), 마을 외(109명, Reference)			
독립변수		예	아니오	전체
주거	도시가스유무	32	147	179 ‘아니오= Reference’
	공동시설 경비지원유무	145	34	
	상수도유무	173	6	
	하수도유무	158	21	
교통	노선버스(15분)여부	169	10	
	순환버스(15분)여부	112	67	
	대중교통(3회)여부	151	28	
	인도차도구분유무	127	52	
교육	학교규모적정유무	142	37	
	우수고등학교유무	120	59	
	방과 후 학교유무	125	54	
	교육발전위원회유무	125	54	
	평생교육시설유무	125	54	
보건의료	내과/한방/물리치료	165	14	
	순회방문(월1회 등)여부	133	46	
	의약품구입(20분)가능여부	177	2	
사회복지	재가서비스(주1회)유무	144	35	
	청소년센터(30분)유무	148	31	
	초등학생돌봄(20분)유무	134	45	
	영유아보육시설(20분)여부	157	25	
	다문화지원센터(30분)여부	133	46	
응급	응급처치(30분) 여부	171	8	
	소방차(5분)여부	154	25	
	방범용 CCTV유무	118	61	
	112신고(5분)유무	156	23	
문화	열람/대출(읍면내)가능유무	141	38	
여가	문화시설(30분) 유무	135	44	
	전문공연(월1회) 유무	89	90	
	문화프로그램 유무	124	55	
	문화서비스(월2회)유무	66	113	
정보통신	인터넷	149	30	
	IPTV	89	90	
성별	남	172		
	녀	7		Reference
연령	40세 미만	17		
	40-50 미만	26		
	50-60 미만	58		
	60세 이상	78		Reference
거주기간	1-5년 미만	14		
	5-10년 미만	13		
	10-20년 미만	9		
	20년 이상	143		Reference
지역산업	농업	129		
	서비스업	28		
	기타	22		Reference
직업	농업	109		
	기타	70		Reference
전체		179		

2. 분석방법

희망거주지로서 마을 내와 마을 외는 관측 불가능한 효용함수 I_i에 따르며, 〈표 1〉의 독립변수 X_i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로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I_i = BX_i + u_i$$

여기서 i는 i번째 개인을, u_i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 함수는 $I_i \geqq 0$일 때 $Y_i = 1$(마을 내), $I_i < 0$일 때, $Y_i = 0$(마을 외)의 관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 마을 내 (Y=1)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Pr(Y_i = 1) &= \Pr(I \geqq 0) \\ &= \Pr[(BX + u_i) \geqq 0] \\ &= \Pr(u_i \geqq -BX) \end{aligned}$$

여기에서 Y_i는 확률분포를 따르고 있어, u_i의 확률분포에 의존하며, 확률분포는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이고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른다.

$$P_i = \Pr(Y_i = 1) = \Pr(u_i \leqq BX)$$

여기서 로짓모형 u_i는 확률분포가 $P_i = \frac{1}{1+e^{-Z_i}}$와 같은 로지스틱확률분포를 따르며, P_i는 $Y_i = 1$일 확률, 즉 마을 내를 선택할 확률을 표현하며, $Z_i = BX + u_i$로 나타난다. 따라서 불만족할 확률은 $1 - P_i = \frac{1}{1+e^{Z_i}}$로 표현된다. 마을 내와 마을 외의 확률 간의 비율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frac{P_i}{1-P_i} = \frac{1+e^{Z_i}}{1+e^{-Z_i}} = e^{Z_i}$$

$\frac{P_i}{1-P_i}$는 희망거주지로서 마을 내를 선택할 확률의 odds 비율로서, 마을 내를 선택할 확률과 선택하지 않을 확률 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식에 자연대수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데, X는 분석 자료인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각 변수의 벡터이며, β는 각 변수별 효과를

보이는 벡터이다. 따라서 다음 식에서 odds 비율에 로그를 취한 값은 X와 β에 대하여 선형관계를 갖는다.

$$L_i = \ln\left(\frac{P_i}{1-P_i}\right) = Z_i = BX_i + u_i$$

그런데, 이변량 혹은 다변량 분석에서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는 종속변수 최소 집단을 기준으로 독립변수 개수의 10배가 되어야 하며, 최소 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Hulley et al., 2007; Hair et al., 2006). 본 연구의 경우 종속변수 중 최소치는 마을 내 70명으로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입변수는 14개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하나, 조사된 변수는 38개로 다변량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투입기준에 위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소기준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1단계로 각 부문별 변수를 투입하여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를 추출한 후, 2단계로 추출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희망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분석변수 추출

〈표 2〉는 종속변수 수에 따른 독립변수 수의 표본조건을 맞추기 위해 희망거주지 선택(마을 내/마을 외)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거·교통·교육 등의 각 부문별로 포함되어 있는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변수추출을 위한 유의수준 기준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수의 표본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가급적 많은 수의 변수들을 고려하기 위해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추출하였다.

우선 주거부문에서 희망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유무(β= -1.455, p=0.006)만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교통부문을 분석한 결과 도보 15분 내의 순환버스 유무(β= -0.754, p=0.027)가 유의수준 5% 수준 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외의 변수들은 p〈0.10 수준에서 의미가 없어 2단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 부문별로 추출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교육부문은 학생 수를 고려한 학교규모 적정성 유무(β= -1.525, p=0.000), 읍·면 내 취미 등의 평생교육 제공시설 유무(β=1.163, p=0.016), 보건의료부문은 시·군 내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제공시설 유무(β=1.459, p=0.062), 응급부문은 화재 발생 시 5분 내에 소방차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유무(β= -2.063,

p=0.002), 112 신고 시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유무(β= 1.840, p=0.014), 여가부문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유무(β= -0.837, p=0.044), 정보통신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여부(β= -0.903, p=0.033)만이 생활환경 차원에서 희망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분석되었다.

개인적 배경 중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희망거주지 선택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거주기간으로서 20년 이상의 거주자와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거주기간 5-10년 미만(β= -1.396, p=0.098), 10-20년 미만(β= 1.311, p=0.665)에서 차이를 보인다. 직업은 기타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때, 직업이 농업(β= 0.741, p=0.008)일 경우 기타부문과 차이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변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제공하는 거주지 환경변수 9개, 개인적 배경변수 2개로서 총 11개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교육부문과 응급부문은 2개 변수들이 포함되어 다른 부문들보다 교육과 응급부문이 희망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문화부문 범주에 포함된 변수들은 희망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문항의 동일성을 검증할 수 없어 제한적이지만, 농촌개발사업에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소득기반이나, 마을경관보다 문화복지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와(최승국, 2014: 344-345) 다르다. 즉 마을에 계속거주하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는 사회복지, 문화부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해당마을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부문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 179명 중 60세 이상은 전체의 43.5%에 달하고, 50대 이상 60세 미만을 포함하면 75.9%에 달하는데, 청소년 센터, 초등학생 돌봄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이 없을 수 있어 해당시설들의 이용이 없는 이유로 동 시설들이 주는 시설들의 편익이 낮은 것이 주된 이유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동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의 자녀들을 갖는 연령대가 많은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후 엄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분석변수 추출결과

차원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r 〉 ChiSq	
주거		도시가스 난방	-1.455	0.525	0.006	***
		공동시설 지원	-0.023	0.421	0.957	
		상수도 시설	1.663	1.153	0.149	
		하수도 시설	-0.415	0.508	0.415	
교통		노선버스 (15분)	-1.056	0.737	0.152	
		순환버스 (15분)	-0.754	0.342	0.027	**
		대중교통 (3회)	-0.467	0.442	0.291	
		인도차도구분	0.349	0.380	0.359	
교육		학교규모적정	-1.525	0.428	0.000	***
		통학수단제공	-0.232	0.430	0.589	
		우수고등학교	0.576	0.441	0.192	
		방과 후 학교	-0.682	0.479	0.155	
		교육발전위원회	-0.366	0.469	0.436	
		평생교육시설	1.163	0.484	0.016	**
보건의료		내과/한방/물리치료	1.459	0.780	0.062	*
		순회방문(월1회)	-0.041	0.357	0.908	
		의약품구입(20분)	13.948	888.400	0.988	
사회복지		재가서비스(주1회)	0.500	0.463	0.280	
		청소년센터(30분)	0.174	0.522	0.738	
		초등학생돌봄(20분)	-0.524	0.463	0.258	
		영유아보육시설(20분)	0.100	0.620	0.872	
		다문화지원센터(20분)	0.525	0.424	0.216	
응급		응급처치(30분)	1.568	1.122	0.162	
		소방차(5분)	-2.063	0.671	0.002	***
		방범용 CCTV	0.094	0.357	0.793	
		112신고(5분)	1.840	0.746	0.014	**
문화		열람/대출(읍면 내)	-0.375	0.373	0.315	
여가		문화시설(30분)	0.085	0.415	0.838	
		전문공연(월1회)	0.210	0.402	0.601	
		문화프로그램	-0.837	0.416	0.044	**
		문화서비스(월2회)	0.378	0.400	0.344	
정보통신		인터넷	-0.903	0.423	0.033	**
		IPTV	0.112	0.324	0.728	
개인적 배경	성별	남성	0.387	0.634	0.063	***
	연령	40세 미만	-0.420	0.726	0.563	
		40-50세 미만	-0.236	0.460	0.603	
		50-60세 미만	0.065	0.389	0.868	
	거주기간	1-5년 미만	-0.002	0.742	0.998	
		5-10년 미만	-1.396	0.844	0.098	*
		10-20년 미만	1.311	0.665	0.049	**
	주산업	농업	-0.288	0.393	0.463	
		서비스업	0.365	0.386	0.345	
	직업	농업	0.741	0.281	0.008	***

*** p〈0.01, ** p〈0.05, * p〈0.1

2. 분석결과

1) 농어촌서비스 기준항목이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효과

추출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마을 내, 마을 외[읍·면 소재지(관내), 인근 시·군, 대도시]로 구분된 희망거주지 선택에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제공하는 생활환경 조건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희망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생활환경 조건과 관련된 9개 변수, 2개의 개인적 배경변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민기 등(2014)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문화원·갤럽(2016)의 연구와 같이 생활환경이 이주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생활환경과 관련된 7개 변수 중 '아니오'를 레퍼런스로 할 때, '예'인 경우, 즉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활용하여 정책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생활환경이 충족되었을 때 마을 내 거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5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는 2개로 분석되었다.

〈표 3〉 분석결과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r 〉 ChiSq	
Intercept		-0.028	1.179	0.981	
주거	도시가스난방	-1.112	0.673	0.098	*
교통	순환버스(15분)	-0.549	0.440	0.213	
교육	학교규모적정성	-1.877	0.504	0.000	***
	평생교육 시설	1.522	0.542	0.005	***
보건의료	내과/한방/물리치료	1.365	0.888	0.124	
응급	소방차(5분)	-2.265	0.811	0.005	***
	112신고(5분)	2.454	0.868	0.005	***
여가	문화프로그램	-1.018	0.508	0.045	**
정보통신	인터넷	-1.418	0.568	0.013	**
거주기간	1-5년 미만	0.538	0.939	0.567	
	5-10년 미만	-1.580	1.280	0.217	
	10-20년 미만	1.556	0.850	0.067	*
직업	농업	1.266	0.462	0.006	***

*** p〈0.01, ** p〈0.05, * p〈0.1

우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시설이 없는 것에 비해 마을 내 거주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1.396(p=0.098)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조건이 갖추어지면 마을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설치된 지역은 대도시 주변지역의 농촌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고려하면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은 대도시 혹은 도시권의 주변부일 개연성이 높다. 대도시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면 이들 농촌지역 거주자들은 값싼 집값 등을 고려하여 농촌마을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어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보다 계층구조가 높은 지역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시설은 도시화의 영향권이 확대된 결과로서 도시로 진입하지 못하는 농촌지역거주자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른 부문에 비해 교육부문은 학교규모 적정성과 평생교육시설의 유무 두 변수가 투입되었는데, 두 변수의 작용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학생 수를 고려한 학교규모의 적정성의 추정값은 β= −1.877(p=0.000)으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 학생 수에 비해 학교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마을외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유의성은 없지만, 〈표 2〉에서 분석된 결과와 결부지어 변수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해석해보면, 통학수단제공의 추정 값은 β= −0.232(p=0.589),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추정 값은 β= −0.682(p=0.155)로 통학수단이 제공되고,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제공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 것에 비해 마을 내 거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시·군에 우수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의 추정 값은 β= 0.576(p=0.192)으로 없는 경우에 비해 마을 내 거주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학수단은 마을 내 가정과 읍면소재지 내 학교와의 이동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상학생이 있는 가족의 마을 내에서 정주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자녀교육과 관련된 편의성을 높이는 수단이 제공되어도 교육과 관련하여 자녀의 수고를 덜기 위한 의지가 읍·면 소재지 등 마을 외부지역으로의 거주지 이동을 위한 핵심임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상위학교 진학 등을 위한 교육수준의 문제가 마을외부로의 거주지 이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응급부문은 5분 내의 소방차 도달여부가 마을외부로의 거주지 이동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추정 값은 β= −2.265(p=0.005)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안전한 생활이 유지되는 환경조건일 경우 마을 내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소화기 보급, 산림 면적이 넓으면 감점을 받고 시가지 등 도시화 지역면적의 크기, 재정자주도 등이 높으면 가점을 받는 국민안전처의 안전지수 산출 식에 농촌지역 지자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아시아경제, 2015.8.11.), 화재부문에 대한 농촌지역의 안전은 실제 공표되는 것보다 양호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부문에 대한 편익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소방차가 5분 내 도착가능한 마을은 동일 읍·면내에서 비교적 중심지와 가까운 거리일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누를 수 있는 거주지로서 읍·면 소재지, 대도시 등을 선호하는 결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며, 앞서

논의한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과 비슷한 맥락의 성격을 갖는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여가부문 중 문화프로그램의 추정 값은 β= -1.018(p=0.045)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부정적 영향을 주며,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표 2〉의 여가부문과 결부시켜 살펴보면,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이 있는 경우의 추정 값은 β= 0.085(p=0.838), 월 1회 이상 전문공연의 추정 값은 β= 0.210(p=0.601), 월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의 추정 값은 β= 0.378(p=0.344)로 비록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변수의 방향성은 해당되는 항목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마을 내 거주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조사문항 중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유무의 범주에 월1회 이상 전문공연의 관람여부, 월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유무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마을 내 정주를 희망할 확률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나, 분석된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여가부문에서 분석된 문화프로그램의 내용을 문화시설, 전문공연, 문화서비스와 다른 생활조건으로 해석하면, 설문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은 강연 등과 같은 전문 강좌 등의 내용들로 인식한 결과로서, 낮은 강사의 질, 한정된 주제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시행되는 강좌 등이 수강하는 사람들의 지적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로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보다 대도시 등의 상위계층구조를 갖는 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의 추정 값은 β= -0.903(p=0.033)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희망거주지로 마을 내를 선택할 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령층보다 주로 젊은 층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의수준은 없지만 〈표 3〉의 연령별 효과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에 비해 40세 미만(β= -0.420, p=0.563)과 40-50세 미만(β= -0.236, p=0.603)처럼 나이가 적을수록 마을 외부로의 이주를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층이 갖는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분석된 농어촌서비스 기준 항목 중 마을외부로의 이동보다 마을 내에서 정주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는 읍·면에 취미 등 평생교육 제공시설과 112신고 시 5분 내에 현장에 도착가능이었다. 이와 관련된 생활조건들은 농촌사회의 한계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읍·면에 취미 등 평생교육 제공시설이 있는 경우의 추정 값은 β= 1.522(p=0.005)로 없는 경우에 비해 마을 내 거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노령화된 용두산 권역 주민들은 상향식 농촌계획수립과정에서 소득, 생활환경보다 주민들의 문화, 여가부문에 집중하는 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징을 보이는데(최승국, 2014: 345), 취미 등의 평생교육을 통한 여가활용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노령화가 심한 농촌사회 현실 속에서 농촌마을 주민의 다

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을 위한 취미 등과 마땅한 유흥 등의 여가거리가 부족한 농촌의 현실에서 평생교육시설의 제공이 인구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30-40대 층의 인구유입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사회 인구증가에 큰 기여를 한다. 이들 연령층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환경이 중요한데, 앞선 교육환경의 분석에서 보면 학교규모의 적정성, 통학수단의 제공 등은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표 3〉의 분석결과 중 시·군에 우수고등학교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마을 외부로의 이주보다는 마을 내에서 정주할 확률에 대한 추정 값은 β= 0.576(p=0.192)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이 중시되는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요소보다 상위권대학으로의 진학 등에 유리한 조건을 교육환경이 갖추는 것이 농촌 마을 내 거주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건전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환경이 중요하고, 자녀들이 있는 연령층은 상위권대학 진학률이 우수고등학교의 판단기준인 현실 속에서 도·농간 학력격차가 고려된 농어촌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어촌특례 등의 제도적 기반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간 평생교육 시설의 중요성은 자아실현과 개인의 발전을 위한 측면을 강조해 왔지만, 농촌사회에서 인구유출, 한계마을의 효과적 방어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확인되며, 도시거주 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농어촌특례입학 등이 실질적인 농촌마을 인구유지에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임을 보여준다.

112 신고 시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조건의 추정 값은 β= 2.454(p=0.005)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112 신고 시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마을 내에 거주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안심하고 거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환경 조건이 마을 내에서 정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사회가 점차 노령화되고, 과소화 되는 상황에서 치안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주민이 농촌마을 내에서 거주할 가능성을 높이며, 한계마을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된 결과들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개발사업에서 배후마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설치할 시설선정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배후마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이상준 등, 2015; 이상준, 2014: 25), 양호한 지역이라도 대부분 문화, 건강과 관련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부를 실시하는 수준이다.

분석결과는 마을에서 주민들의 정주의사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장치가 112 신고 시 5분 내 도달(β=2.454, p=0.005), 취미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시설제공(β=1.522, p=0.005)의 순이다. 두 부문의 서비스들은 농식품부가 아닌 각 부문을 관장하는 공공부문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농촌개발사업 내에서 배후마을 주민의 마을 내 정주의사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치안확보를 위한 여건조성, 취미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과 관련된 생활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의 활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teenbekkers et al.(2008)와 Halfacree(1994)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은 치안의 중요성이 국내 농촌현실에도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나, 취미 등의 여가를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중요성은 국내 농촌의 현실과 다른 상황임을 보여준다.

2) 개인적 배경이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효과

개인적 배경 중 거주기간이 마을 내 정주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10-20년 미만(β=1.556, p=0.067)의 연령층만이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 유의수준은 없지만, 다른 거주기간과 결부지어 논의해 보면, 5-10년 미만의 추정 값은 β= -1.580(p=0.217)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거주기간 20년 이상에 비해 마을 내 머무를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1-5년 미만의 거주기간의 추정 값은 β=0.538(p=0.567)로 20년 이상에 비해 마을 내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1-5년 미만의 거주기간은 새로운 정착지로서 마을을 선택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적응하는 시기이나, 5-10년 미만의 경우는 어느 정도 마을 내 환경에 익숙해지고, 귀농·귀촌 등을 통해 당 마을을 선택한 목적 등이 현실생활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가의 판단이 서는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을 따르면 희망을 갖고 해당 마을을 선택한 1-5년 미만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선택한 동기를 충족시켜주고, 5-10년 미만의 거주기간까지 그 선택 동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즉 귀농자의 경우 1-5년 미만의 적응과정 기간에 선택한 작목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자립농으로서의 기반을 확충해주고, 귀촌인의 경우 주민공동체와의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등이 집중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추정 값은 β= 1.266(p=0.006)으로 기타 직업에 비해 마을에 거주할 확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마상진 등(2016: 53)은 귀농·귀촌인의 직업을 농업, 겸업, 농업외 타 분야, 무직으로 구분하고, 직업은 역귀농·역귀촌의사와의 관련성이 없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 농업인 경우 희망거주지로 마을 내 거주를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농촌마을 내 거주가 경작에 유리하거나, 농지매매가 쉽지 않아 거주지 이동이 용이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귀농인의 경우 마을 내 정주가능성이 높아 한계마을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귀농초기에 관리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개인적 배경이 주는 효과를 보다 폭넓게 살피기 위해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변수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표 2〉를 해석하면, 60세 이상을 레퍼런스로 연령대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추정 값은 β= -0.420(p=0.420), 40-50세 미만(β= -0.236, p=0.603), 50-60세 미만(β= 0.065, p=0.868)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마을 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농촌사람들은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만성질환 환자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농촌이 직면한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Rice & Webster, 2017). 이러한 논거를 따르면 생애주기에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의료 등의 수요가 증가되어 의료 환경이 양호한 환경으로 이주의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분석된 결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 〈표 3〉의 결과와 결부지어 해석해 보면 시·군 내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이 있는 경우의 추정 값은 β=1.365(p=0.124)로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의료시설의 양호한 조건은 마을 내 거주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생애주기 상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노년층은 마을 내보다 의료시설이 양호한 읍면거점지역, 대도시 등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타당하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마을 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농촌지역의 의료 환경이 양호할 가능성도 있지만, 노령층일수록 마을 외부로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새로운 적응, 비용과 구직 등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상황일 수 있다.

지역의 주된 산업도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으나(〈표 2〉참조), 거주하는 마을의 주된 산업이 농업일 경우의 추정 값은 β= -0.288(p=0.463), 서비스업은 β=0.365(p=0.345)로 기타산업을 레퍼런스로 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해당되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농업일 경우 마을 외부로의 이주가능성이 높아지고, 서비스업의 경우 마을 내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농촌지역에서 주산업이 서비스업이면 농업인 지역보다 도시화도가 높아 농업이 주산업인 지역보다는 도시서비스 등을 누리는데 양호한 환경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과 같이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통해 파악되는 생활환경 조건은 농촌지역 내 이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되나, 다수의 변수가 영향력이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변수들이 주로 공공부문에서 지원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부문의 수요에 반응이 느린 것도 원인으로 생각되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경우 해당시설의 확충이 농어촌 인구의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 도시화의 확장 등으로 인한 효과로서 풀이된다. 또한 개인적 배경으로는 직업으로서 농업은 마을 내에서 거주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하며, 마을 내 거주기간에 따라 마을 내 정주가능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중 일부항목은 동일 시·군 내 한계마을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사업에서 배후마을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의 종류들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귀농, 귀촌자들의 마을 내 이탈방지를 위해서는 정착 후 1-5년 기간 내 집중적인 지원 등을 통해 마을로 이주한 목적을 충족시

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농촌주민의 희망 거주지 선택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촌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자의 농촌사회 적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생활환경의 조건이 농촌지역 내 이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제공하는 생활환경 조건 중 마을 내 정주하게 하는 효과는 주민들의 여가와 관련되는 평생교육시설과 112 신고 시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안전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희망거주지로서 마을 내와 마을 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농어촌서비스 기준 항목은 생활환경 7개, 개인적 배경 2개 변수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교육과 관련된 부문은 서비스가 제공될지라도, 학업과 관련된 자녀의 수고를 덜기 위한 의지의 발현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마을 외로의 이동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치안, 거주자의 취미와 여가거리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보건소 등을 통한 방문하는 의료서비스의 요소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생활여건의 조성은 농촌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한계마을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일 수 있다.

현재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개발사업으로 마련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은 사업대상지의 경관개선, 도로, 주차장 등 농촌관광 등을 고려한 상황에서 환경과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되어 배후마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마을 내에서 거주하는데 기여하는 치안, 평생교육과 관련된 요소를 사업프로그램 및 지원시설의 종류를 반영시키는 것이 한계마을로 변화되고 있는 배후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준다. 배후마을이 사라지면, 읍·면의 거점기능은 약화되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조사대상지역은 읍·면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실태가 일반적인 농촌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생활환경이 일반적인 농촌지역보다 양호해 제공되는 각 서비스부문의 효과가 작게 나타날 개연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전국 3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교적 많은 지역을 표본으로 삼고 있으나, 설문대상자는 남성중심의 리더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 수는 179개로 작다. 경험적으로 볼 때, 마을 리더는 일반주민보다 소득 등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주민의 인식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효과와 관련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농촌주민의

이탈 및 한계마을 방지 등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농어촌서비스 기준과 관련된 논의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동일 시·군내의 단거리 이동에 생활환경이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농촌지역 내 인구이동을 위한 변수설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대구.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38(2): 23-53.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강호제. (2016).「고령자 유치를 통한 지방인구 감소의 해법 찾기」, (사회과학일반).국토연구원.

권영상. (2011). 우리나라 신도시 계획에서 생활권 공간구조의 변화.「국토계획」, 46(2): 193-210.

김경례. (2016). 귀농귀촌인 대안운동의 특성과 함의.「지역사회연구」, 24(2): 55-73.

김광선. (2013).「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채종현·윤병석. (2012).「제10장 농어촌 서비스기준으로 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백수·이정화. (2013).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분석.「농촌사회」, 23(2): 7-48.

김상원·이훈래. (2016). 수도권 도시유형별 내부 인구이동 영향요인 분석.「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9): 737-744.

김정섭·오정훈. (2016).「귀농·귀촌 정책 및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이정해. (2017).「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태. (2012). 어촌지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와 이행실적 점검방식의 개선방안.「농촌계획」, 18(3): 91-101.

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 (2011).「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갤럽. (2016).「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마상진·김경인. (2016).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영향 요인 탐색.「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2): 83-104.

마상진·남기천·최윤지. (2016). 역 귀농·귀촌 의향 영향 요인 분석.「농촌사회」, 26(1): 37-63.

박경철. (2014). 한계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농촌사회」, 24(2): 7-59.

박대식. (2016).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촌주민의 태도 영향요인 분석.「농촌사회」, 26(1): 7-35.

박시현·최용욱. (2014).「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박진도. (2014).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24(1): 45-84.
변혜선. (2016). 「충청북도 귀농 · 귀촌 현황을 고려한 정책제안 (경제/경영학)」, 충북연구원.
송미령·김광선·권인혜. (2010). 「제14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2015). 도시가 농촌보다 안전? 지역별 안전지수 "비현실적", 아시아경제 2015.08.11. 일자
윤병석. (2012).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순덕·최정신·마상진·남기천. (2017). 귀농·귀촌패널로 본 역귀농·귀촌실태. 「농촌사회」, 27(1): 59-93.
윤정미. (2013). 기업탐방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이해와 충남지역 서비스 실태분석. 「충남경제」, 2013(12): 3-12.
윤정미·김동한. (2017). 한계마을 특성분석 및 변화예측.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1): 121-136.
이병기. (2008). 참여정부 농촌개발정책의 회고. 「농촌지도와 개발」, 15(1): 145-175.
이상준. (2014).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충남의 대응과제. 「열린충남」, 66: 29-35.
이상준·오명택·김정연. (2015).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충남리포트」, 166: 1-16
이철우. (2015).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 및 적응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07-225.
이철우·박순호. (2015). 경상북도 귀농·귀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지리학회지」, 50(6): 659-675.
임석회. (2017). 이촌향도와 도시화 단계 전환에 대한 귀촌 · 귀농 인구이동의 함의. 「2017년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5-48.
장민기·이준우·허재욱·김혜민·채상헌·김기현·송기선. (2014).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실태와 관련 정책 발전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농정연구센터.
정원기·안영진. (2016). 우리나라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515-528.
정일홍·이성우. (2010). 농촌이주 도시민의 특성과 공간적 선호. 「농촌사회」, 20(2): 163-190.
최승국. (201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개선방안 연구 : 용두산권역 사례를 위주로. 「관광경영연구」, 18(3): 327-352.
Black, R., Kniveton, D., Schmidt-Verkerk, K. (2011). Migration and climate change: towards an integrated assessment of sensitiv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43: 431-450.
Courtney, P., Mayfield, L., Tranter, R., Jones, P. & A. Errington. (2007). Small towns as

'sub-poles' in English rural development: investigating rural-urban linkages using sub-regional social accounting matrices, *Geoforum*, 38: 1219-1232.

Deller, S.C., Tsai, T., Marcouiller, D.W., English, D.B.K. (2001). The role of amenities and quality of life in rural economic growth.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3: 352-365.

Gkartzios, M., Scott, M. (2009). Residential mobilities and house building in ruralIreland: evidence from three case studies. *Sociologia Ruralis*, 50: 64-84.

Hair, Joseph F., Black, Williams C., Babin, Barry. J., Anderson, Rolph E., & Tatham, Ronald. L. (2005). *Multivariate date analysis (6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Halfacree, K.(1994). The importance of 'the rural' in the constitution of counterurbanisation: evidence from England in the 1980s. *Sociologia Ruralis,* 34: 164-189.

Halliday, J., Coombes, M. (1995). In search of counterurbanisation: some evidence from Dev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of migration and motiv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11: 433-446.

Hulley, Stephen B., Cummings, Steven R., Browner, Warren S., Grady, Deborah G. & Newman, Thomas B. (2007). *Designing Clinnical Research,* NY: Wolters Kluwer.

Knox, P. & H. Mayer. (2013). Small Town Sustainability: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nnovation, *Walter de Gruyter*, Basel.

Lintz, G. & P. Wirth. (2008). The importance of Leitbilder for structural change in small towns W. Strubelt (Ed.), Guiding principles for Spatial Development in Germany. *German Annual of Spatial Research and Policy*, Springer, Berlin pp. 75-95

Mohammad A., & Miller, P. (2013). Factors affecting whether environmental migration is temporary or permanent: Evidence from Bangladesh. *Global Envirionmental Change*, 23: 1511-1524.

Mulder, C. H., (1993). *Migration: a life course approach.* Thesis, Amsterdam.

Naumann, M. & Anja, R. (2012). *Infrastrukturelle Peripherisierung: Das Beispiel Uecker-Randow (Deutschland) disP Plan.* Rev, 48: 27-45.

Rye, J. (2017) Labour migrants and rural change: The "mobility transformation" of Hitra/Frøya, Norway, 2005-2015. *Journal of Rural Studies,* Open Access. https://doi.org/10.1016/j.jrurstud.2017.12.003

Steenbekkers, A., Simon, C., Vermeij, L., & Spreeuwers, W. (2008). *Het Platteland van Alle Nederlanders: Hoe Nederlanders het Platteland Zien en Gebruiken. Sociaalen Cultureel Planbureau*, The Hague.

Su, Y., Tesfazion, P. & Zhao, Z. (2017). Where are migrants from? inter- vs. intra-provincial rural-urban migration in china doi: https://doi.org/10.1016/j.chieco.2017.09.004

Taylor, E. & Martin, L. (2001). Chapter 9 Human capital: Migration and rural population change. *Handook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1) : 457-511.

Van Dam, F. (2000). Revealed and stated preferences for rural living: evidence from the Netherlands. In: Haartsen, T., Groote, P., Huigen, P.P.P. (Eds.), Claiming Rural Identities: Dynamics, Contexts, Policies. Van Gorcum, Assen, pp. 80-91.

Van Dam, F., Heins, S., Elbersen, B. & Elbersen, S.(2002). Lay discourses of the rural and stated and revealed preferences for rural iving: some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a rural idyll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Rural Studies,* 18: 461-476.

Walford, N. (2007). Geographical and geodemographic connections between different types of small area as the origins and destinations of migrants to mid-Wales. *Journal of Rural Studies,* 23: 318-331.

Walmsley, D.J., Epps, W.R., & C. Duncan. (1998). Migration to the new South Wales North Coast 1986-1991: lifestyle motivated counter urbanisation. *Geoforum,* 29: 105-118.

Wirth, P., Elis, V., Müller, B., & K. Yamamoto. (2016). Peripheralisation of small towns in germany and japan – dealing with economic decline and population loss doi: https://doi.org/10.1016/j.jrurstud.2016.07.021

World bank. (2008).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World Bank : Washington, DC.

접수일(2018년 07월 22일)
수정일(2018년 08월 17일)
게재확정일(2018년 08월 22일)

〈국문초록〉

생활환경이 농촌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주는 효과: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이 농촌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분석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읍·거점면소재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38개 권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179부의 설문을 로짓모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마을에서 주민들의 정주의사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장치가 112 신고 시 5분 내 도달(β=2.454, p=0.005), 취미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시설제공(β=1.522, p=0.005)의 순이었으며, 응답자의 직업은 농업일(β= 1.266, p=0.006) 경우 마을에 거주할 확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하는 개발사업에서 배후마을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의 종류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생활환경이 농어촌주민의 거주지 선택에 작용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농촌개발, 한계마을, 인구이동, 농어촌서비스 기준